

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7두64224 판결

[관리처분등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][미간행]

판결

【판시사항】

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·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, 처음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

【원고, 피상고인 겸 상고인】 별지 원고 명단 생략

【피고, 상고인 겸 피상고인】 과천주공6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
【원심판결】 서울고법 2017. 9. 21. 선고 2017누37453 판결

【주 문】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【판결내용 일부】

3.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볼 때, 피고가 총회 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다음 과천시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고, 그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어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한다면,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더 이상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, 그에 따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.

그렇다면 이 사건은 과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원심 변론종결 후에 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그 효력을 다룰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새롭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.

4.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